

코로나19 위기로 가뜩이나 고생하는 노동자들 탄력근로 확대로 노동조건, 임금 삭감하려는 정부

관련 기사 3면



이건희 사망과
재벌 개혁

2면

미국 대선
누가 당선되든
변화는 대중 스스로
싸워야

6~7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으로
미국 사회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7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과
부패 의혹

8, 9~10면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10면

부실한
택배 대책으로
과로사 못 막는다

11면

낙태는
선택할 권리다

5, 12면

삼성 이견희 사망 부패와 노동자 착취로 쌓아올린 신화

강동훈

10월 25일 삼성그룹 회장 이견희가 사망하자, 우파들과 그 언론들은 이견희에 대해 낮간지러운 찬사를 늘어놓았다. “시대를 앞서 간 혁신가”, “한국 위상 높이는 데 기여한 분”, “반도체 신화” 등등을 운운하며 말이다.

재벌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과 정부·여당 인사들도 이견희를 조문하며 찬양 대열에 합류했다. 삼성을 비판하는 데 앞장선다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도 “한국 경제를 오늘날의 수준과 경쟁력으로까지 끌어올린 데는 이 회장의 공로가 컸다”며 이견희의 공을 말했다. 비록 이견희에게 부패, 정경유착, 노동자 탄압 등의 과도 있다고 말하지만 말이다.

아무튼 우파·중도 세력들은 삼성과 이견희가 한국 경제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평가한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이견희의 공 운운하는 것은 그들도 삼성이 제공하는 광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한몫할 것이다. 실제로 2010년 〈경향신문〉은 전남대 김상봉 교수의 이견희 비판 칼럼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게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진실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만들어 낸 부를 이견희 일가가 친일과 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 부패로 독식한 것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은 일제와 유착해 중일전쟁 때 일본군에게 군량미와 청과물 등을 팔아 돈을 벌어들였다. 해방 후에는 적산(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재산)과 미국의 원조 자금이 이병철의 사업 밑천이 됐다. 적산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상이었는데, 당시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이것은 공짜나 다름 없었다.

이병철은 자신을 후원하는 독재



한국 사회 부패의 상징 2015년 삼성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가 불법·비리를 저지르고도 탈끝 하나 다치지 않은 이견희 일가에게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정권에 두둑하게 보상했다.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에 자금을 제공했다. 그래서 4·19 혁명에서 부정 축재자 이병철 처단 요구가 울려 퍼졌다. 5·16 군부 쿠데타 이후 이병철은 박정희와 유착했고, 박정희는 이병철에게 면죄부를 줬다. 1970년대에 삼성은 박정희 정권과 유착해 중화학공업, 기계, 화학, 전자, 호텔 등으로 크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대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견희는 반도체 사업에 뛰어 들 수 있었다. 우파 세력들은 이견희를 반도체 산업을 키운 “선각자”로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견희가 삼성 회장으로 취임한 1980년대에 앞으로 반도체·컴퓨터 산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견하

는 사람들은 많았다. 삼성뿐 아니라 일본·대만·미국 등의 많은 기업이 당시에 반도체·컴퓨터 산업에 뛰어 들었다.

일제, 이승만, 박정희

삼성반도체가 성장한 데는 독재정권의 지원도 한몫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앞세웠던 박정희 정권과 차별화를 하면서, 반도체·컴퓨터·통신기·전자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계획을 짰다.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재벌들은 과잉·중복 투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전두환 정권은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을 구한다며 온갖 특혜를 제공했다. 게다가 온종일로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

본 엔화가 초강세가 되자 삼성반도체는 일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적인 개인용 컴퓨터(PC) 판매 확대 덕에 사업을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과의 유착, 부패는 계속됐다. 이견희는 아홉 차례에 걸쳐 모두 250억 원을 노태우 정권에 헌납했다. 2002년 대선에서 삼성이 대선 후보들에게 뿌린 돈만 38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에 340억 원을 제공한 것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선배에도 30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

삼성과 주류 정당들, 검찰이 유착돼 있음은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이견희는 무

혐의로 풀려났고, 오히려 이를 폭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삼성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오랫동안 법원과 검찰 등에 자금을 뿌리면서 “장학생”을 키워 왔음을 폭로했다.

이렇게 쌓아올린 부와 권력은 불법·탈법을 동원해 헐값으로 자식들에게 세습됐다. 이견희가 삼성을 물려받을 때 낸 상속세는 15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견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인수 등을 통해 몇 톨 들이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이재용에게 넘겼다.

이견희가 죽자 이재용 등이 낸 상속세가 10조 원이 넘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우파 세력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감면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 그러나 2014년 이견희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에만도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사주 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2조 8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보면, 오히려 탈법·불법으로 삼성 경영권을 헐값으로 넘기고 있는 게 진실이다. 게다가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더 손쉽게 하려고 박근혜·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줬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조작·은폐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쥐어짜 온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이재용이 ‘무노조 경영’ 포기를 얘기하자 이게 기사화됐을 정도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또, 일흔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뇌종양 등을 얻어 목숨을 잃었는데도 삼성은 책임 회피에 급급해 왔다.

요컨대, 이견희 일가의 막대한 부에는 정경유착과 노동자 착취·억압이 아로새겨져 있다.

재벌 개혁은 공상이고 아래로부터 투쟁과 생산수단 접수만이 현실적이다

이견희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견희에 재벌 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총수 일가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재벌 그룹의 소유 구조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진보적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 재벌개혁론자들은 여러 주주들이 지분을 나눠 갖는 KT를 모범적인 지배 구조라며 추켜세웠다. 그러나 KT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동자 수만 명을 해고했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실적 압박으로 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

졌다. 재벌 개혁은 수만 명의 금융자산가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노동자들의 처지라는 면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점은 정부가 이재용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말로는 ‘적폐 청산’, ‘재벌 개혁’을 내세웠지만 말이다. 삼성 이재용, 롯데 신동빈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하에서 풀려났고, 정부가 기업주들을 초청할 때마다 초청받는 등 오히려 국정 동반자 대접을 받고 있다.

사실 재벌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과정이 공상적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소수에게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성과 같

은 것이다. 마르크스는 “축적을 위한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력이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낳는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이러저러한 재벌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사소한 재벌 개혁에도 실패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재벌을 해체했지만 곧 새로운 형태의 기업 집단이 등장했다.

정의당·진보당·민주노총 등도 이견희 사망 논평에서 또다시 재벌 개혁을 주장했다. 물론 재벌들이 매년 수십조 원씩 쌓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정당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재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

된 표적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과도 협력해 기업 살리기에 수백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해고, 임금 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하고 있다. 당장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태일 3법 제·개정 등을 달성하려면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과도 맞서 싸우며 체제 자체를 공격해야 한다.

지금 같은 경제 대침체기에는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혁명적 또는 혁명에 조금 못 미치는 거대한 노동자 투쟁으로 지배계급을 압박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재벌에 고용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단결해서 자신의 사용자에 맞서고, 다른 기업과 산

업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그들에게 연대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이 부문을 초월해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이를 통해 과감하게 자본주의 국가 및 시스템과 대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진보당·민주노총이 이번 논평에서 이견희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킨 공을 인정한 것이나, 정의당·민주노총이 이재용의 삼성이 재벌개혁을 자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삼성을 비롯한 기업주들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식을 고무하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재벌 표적론을 내세워,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고 특히 노동계급의 고유한 투쟁 방법(특히, 점거 파업)을 사용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재벌들로부터 양보를 얻는 것도 어렵게 된다.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박설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1월 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노동자들을 더 확실하게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가증스런 거짓말임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노동개악은 정규직, 비정규직·취약계층 가릴 것 없이 노동자 전반의 조건 하락을 노린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양보를 압박하던 지난 6~7월에 바로 이런 노동법 개악안들을 물밑에서 착착 추진해 왔다. 그 기간에 노조법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역대 최악으로 결정됐다.

즉, 정부는 사회적 대화로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압박할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목을 붙잡아 저항을 마비시키는 효과도 노렸다. 단지 노사정 잠정합의안의 내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 추진 자체가 부절절했다.

정부·여당이 국회에 상정한 노동법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 저항권을 공격하는 내용들이다. 크게 두 가지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약 후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정책의 하나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기업주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탄력근로제는 사용자가 더 손쉽게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해 주고,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사용자들은 일감이 몰릴 때 추가 인건비 부담 없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자들을 일 시킬 수 있다. 일감이 줄어들 때 노동시간을 좀 줄여서 법률상 정해진 단위 기간 동안의 평균만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노동시간의 불규칙성과 장시간 압축 근무로 인해 건강이 파괴되고 생활상의 안정도 흐트러진다.

연장근무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임금 손실도 크다. 시급 1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평균 78만 원의 임금이 깎인다는 조사도 있다(양대 노총).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일제 기간은 임금 수준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사용자들이 유연하게 인력·시간을 배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노동강도 강화, 교대제 개악, 저임금·단기 비정규직 확대로도 이어진다.

한편, 정부는 ILO 기본협약 기준을 빌미로 노동조합법도 개악하려 한다.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했더니, 되레 후퇴시키는 것이다.

노조법 개악이 노리는 바도 핵심은 노동조건 하락에 있다. 가령, 사업장 점거 금지의 노동자들의 저항권을 제약해 고용·조건 방어를 위한 투쟁의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노동자들의 조건상향 요구에 대해 시간을 끌며 제자리걸음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가증스런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미 누더기 돼 온 주 52시간제, 더 누더기로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노동법 개악을 추진해 왔다. 조국 사태, 패스트트랙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진흙탕 정쟁 속에 국회 통과가 지연돼 오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부·여당도 개악 의지가 강하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주 52시간제를 실질적으로 후퇴시켜 왔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 준다. 2018년 2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부터 그랬다.

가령, 정부는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것부터 추진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시행을 6개월 연기했고, 지난해 말에는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시행을 1년 연기했다. 그래서 아직도 전체 노동자의 85퍼센트

가량이 주 52시간제를 전혀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주당 64시간까지 일을 부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제에도 대폭 손봤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사실상 전면 확대하는 시행령을 공포하고(1월), 사용 기간도 현행 90일보다 사실상 두 배나 늘릴 수 있도록 했다(7월).

그 효과로, 올해 들어 9월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3279건). 지난해 1년 동안보다 3.6배나 늘었고, 문재인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을 독려하기 이전인 2017년보다는 무려 218.6배나 늘었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7년 이래 줄어 왔지만, 정부의 '줬다 뺐기' 공격 속에서 그 수준은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연평균 노동시간이 1967시간이나 돼 멕시코에 이어 여전히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인력이 확충되기는커녕, 되레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강도가 오르고 변형근로가 확대되는 등 조건 악화도 잇따랐다.

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업무량이 폭증한 택배, 간병인 등의 노동자들은 아예 근로기준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71시간 넘게 일하고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정 노동시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결국 문재인인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은 요란한 말 잔치로 끝났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그조차 더 악화시키는 법 개악의 초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

확대되는 유연근무, 임금체계 개악 시도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악의 핵심 키워드다. 정부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도입을 포함해 각종 유연근무제 지원 방안을 내놓고 기업들에게 활용을 적극 권장해 왔다.

물론, 정부·여당은 10월 초에 국민의힘 김종인이 제안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고 요건 완화 등을 제외하면 노동조건·임금의 유연성 확대 문제에선 약간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정부의 뒷받침 속에서 이미 사용자들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깎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7~8월 발표된 조사를 보면, 실제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14.3퍼센트나 늘었다(36.6퍼센트). 대기업의 경우, 신규 도입·확대한 곳이 75퍼센트에 달했다. 그 결과 대기업의 60퍼센트는 유연근무제가 더 적은 비용으로 탄력적으로 인력

을 운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된 이후에도 지속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폭이 더 커져 생활고가 증대하고 있다. 일부 직장인들 사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보충하는 '1.5잡'이 늘고 있는 이유이다.

더구나 기업주들은 유연근무제 시행을 계기로 평가·보상체계의 변화도 꾀하려 한다. 성과·직무 중심의 인사 평가, 임금체계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찍이 중점 과제로 제시해 온 임금체계 개악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올해 초에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당부분 도입됐고(평생 '최저임금 고착화'를 부르는 표준 임금제),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취약 사업장부터 개별 기관별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직무급제가 “공정 임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기이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은 명백히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봉제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폐지·완화하겠다는 것인데다가, 직무 등급마다 임금 상한선을 정해 임금 인상의 폭을 제한한다.

요컨대, 정부와 사용자들은 사상 최악이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 국회에서 개악안 강행 처리는 이미 기정사실로 돼 있다. 노동자들의 단호한 저항이 노동개악을 막을 수 있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교회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olidarity.org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독기간 ☐ 1년 ☐ 2년 ☐ 2년 이상 ()년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ws@wspaper.org



영화평 | 〈저스트 머시〉 (2019년, 136분)

미국 사법체계의 추악한 인종·계급 차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으로 재조명되다

김현진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꼭 보길 바란다. 반드시 엔딩 크레딧 끝까지 봐야 한다.

1986년 앨라배마에서 18살의 백인 여성이 살해되자, 이듬해 흑인 벌목공 월터 맥밀란이 체포됐다. 사건의 배경인 먼로 빌은 인종차별에 관한 유명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의 배경이기도 하다.

영화의 내용은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동명의 회고록에 기초했다. 국내에는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란 제목으로 출판됐다.

그는 삼십 년 넘게 가난하고 감금된 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의 단체 ‘이퀄 저스티스 이니셔티브’(EJI)는 140여 명의 사형수를 경감, 전환, 석방했다.

영화는 충분히 좋다. 다만,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보충이 더 필요할 뿐이다.

영화와 달리, 보안관 테이트는 월터를 살인 혐의로 체포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마이애스(거짓 증언한 백인 남성)에 대한 강간, 즉 “남색” 혐의로 체포했다. 동성 간 성행위가 위법임을 활용했다. 그러나 두 명은 만난 적도 없었다.

월터는 보안관이 말한 “남색(sodomy)”이란 단어를 몰라, 질문해야 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자, 실소가 터졌다.

그러나 보안관이 사납게 말했다.

“우리는 너희 감동인들이 백인 여자와 어울려 다니지 못하게 할 거다. 너 같은 놈들은 모빌의 그 감동이한테 그랬던 것(KKK의 흑인 살해 사건)처럼 끌고 가서 목매달아버려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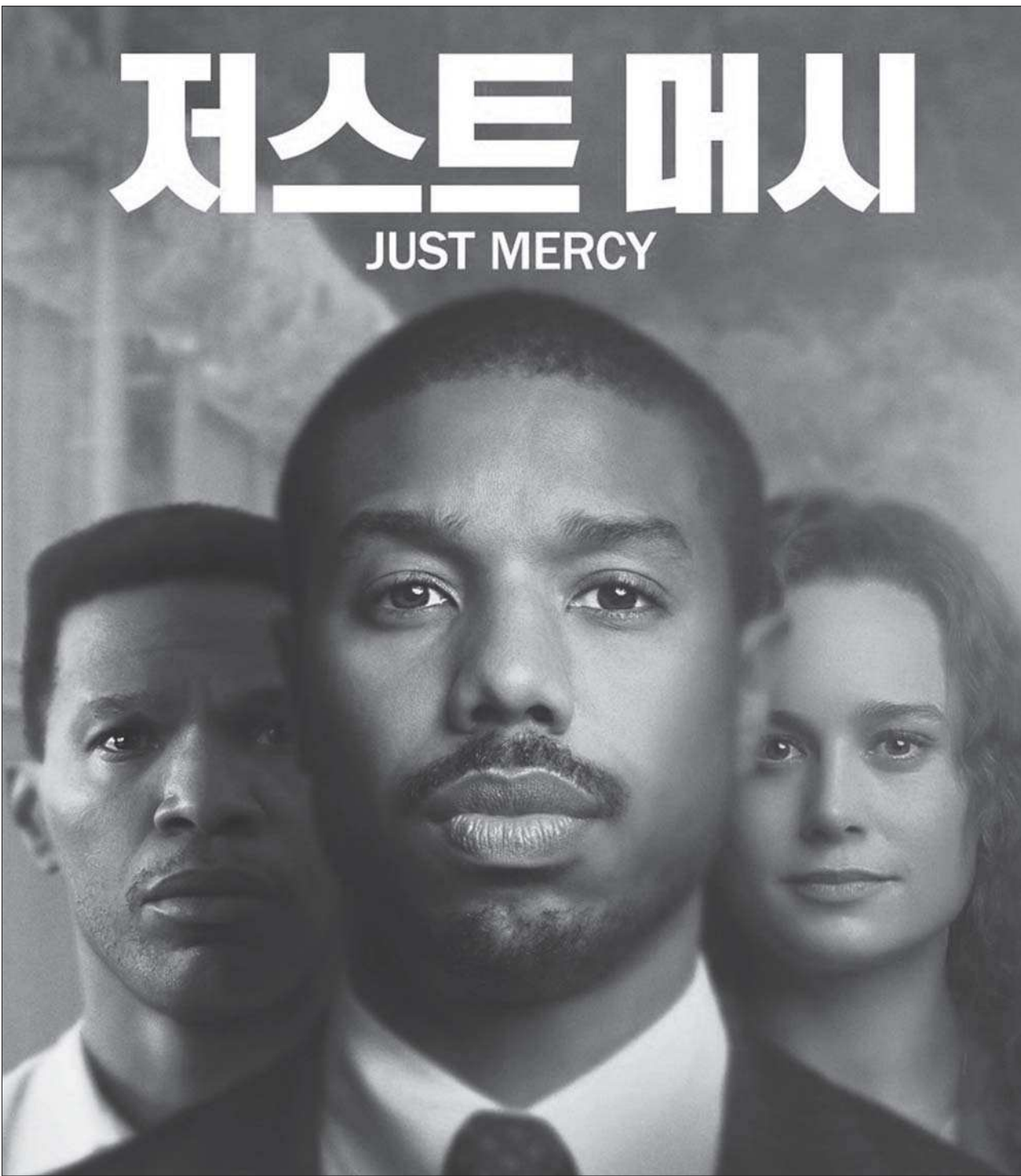
실제로 앨라배마의 주헌법은 인종 간 결합을 금지했다. “입법부는 흑인 또는 흑인의 후손과 백인의 결혼을 인가하거나 합법화하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2000년까지 앨라배마에는 인종 간 결혼금지법이 존재했다.

어쨌든 영화처럼, 체포 먼저하고 조작했다. 살해 추정 시각, 월터와 내내 함께 있었던 최소 10여 명의 증언은 무시됐다.

실제로 재판도 하기 전에 보안관 테이트는 월터를 13개월 동안 교도소 사형수 수감동에 투옥했다.

사형수가 아닌 건 둘째 치고, 교도소는 기결수만 수감돼야 한다. 미결수는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 중대한 위법이 었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월터와 마이애스는 전기의자 처형 일정에 맞춰서 이감됐다. 사람 살 타는 냄새를 맡으며, 공포에 떨게 했다. 월터는 사기가 저하됐고 마이애스는 위증하기로 결정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한창이던 7월, 미국에서 17년 만에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이 집행됐다

이 과정을 영화는 압축해 보여 준다. 실제로는 마이애스가 다시 위증을 거부했다. 그래서 보안관은 그를 또다시 사형수 감방에 보냈고, 패닉에 빠진 마이애스는 정신병원에 한 달간 입원됐다. 그래도 위증을 거부했다. 다시 세 번째로 사형수 감방에 이감되고 나서야, 결국 위증하게 됐다. 그러나 나중에 월터의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죄책감에 잠을 잘 수 없다고, 역시 보안관과 교도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언론은 벌목공 월터를 “마약계의 대부,” “성범죄자,” “남색 혐의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마,” “강도와 절도, 위조, 마약 밀수를 일삼는 범죄 조직의 일원,” “조직의 수괴” 등이라 보도했다.

영화처럼 변호사들은 살해 협박에 시달렸고 미행도 당했다. 폭파 위협이 3번이나 있었다. 배달된 폭탄에 흑인 변호사가 살해되거나, 항소법원의 판사가 살해되는 사건들이 실재하던 때였다.

영화처럼 검사가 지시한 위증을 거

부한 백인 경찰관이 있었고, 해고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검사와 판사는 면책권이 대단히 강력하다. 예나 지금이나 이 정도는 거의 책임지지 않는다.

사형수

변호사 브라이언이 알몸 수색을 당하는 장면은 실제로는 “정신장애”가 있는 다른 사형수 에이버리 쟁킨스의 사건을 맡았을 때 겪은 에피소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성에 관한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의 10장을 직접 읽어 보길 권한다. 정말 감동적이다!

월터는 석방됐지만, 고통은 지워지지 않았다. 석방된 후 사형제 폐지와 인권 변호를 위한 좋은 활동을 이어갔지만 7~8년 후 조기 치매에 걸려, 2013년에 사망했다. 요양원에서는 자신이 다시 사형수가 된 줄 알고 괴로워했다.

정부 차원의 배상은 없었다. 민사소송의 합의금이 있었지만, 정작 주범격인 보안관은 빠져나갔다. 보안관에 6번이나 재선해서 2019년에 은퇴했다.

은퇴 직전 그가 다시 언론을 뒀는데, 가관이였다. 앨라배마에서는 수감자들의 식비를 아끼면, 보안관에게 돌아간다. 즉, 재소자들에게 싸게 먹일수록 보안관들은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 그는 세금도 냈고 합법이라 주장했다.

영화처럼 사형수들은 동료 사형수가 처형될 때 미친 듯이 철창을 두들겼고, 소리쳤다. 사형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쳤다. 교도관들에게 “살인자들이!”라고 외쳤다.

영화에는 같은 앨라배마 출신 교도소 사형수 수감동의 또 다른 사형수 앤서니 레이 힌튼도 나온다. 그는 1985년 체포돼 결백한 사형수가 됐고 2015년, 30년 만에 무혐의로 석방됐다.

홀로 열 명의 남매를 키운 어머니는 막내가 석방되길 17년 동안 애타게 염원했지만, 13년 전에 돌아가셨다.

“내가 유일하게 법한 죄가 있다면 하필 앨라배마에서 흑인으로 태어난 것 뿐이었다.”(앤서니 레이 힌튼, 《그들은 목요일마다 우리를 죽인다》)

1편이 안 되는 그의 독방은 사형집행실에서 불과 9미터 떨어졌다. 전기

의자 처형은 냄새가 다음날까지 남았다. 코에서 탄내가 나고, 목이 따끔거리고, 눈물이 흐르고, 속이 울렁거렸다.

54명이 그의 방문 앞을 지나서 죽으러 갔고, 22명이 그 전에 자살했다. 한 사형수는 “사형이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라”는 리본을 가슴에 달고 처형장을 향했다.

사형수 수감동은 아침 식사가 오전 3시, 점심이 오전 10시, 저녁 식사가 오후 2시다. 아침 식사는 계란 가루와 비스킷 하나, 젤리 한 스푼이고, 밤이면 바퀴벌레와 쥐들이 기어 나오고 사형수들의 신음, 울음 소리, 비명이 끊이지 않는다.

그의 책 《그들은 목요일마다 우리를 죽인다》에는 더 많은 이야기와 유머가 있다. 그는 교도소장에게 요구해 복클럽을 조직하고 사형수들과 책을 읽고 토론했다. 그는 사형수들의 진정한 친구가 됐다.

흑인 청년을 린치하고 죽인 백인 사형수와도 친구가 됐다. 그에게 흑인 작가 제임스 볼드윈의 책들, 《앵무새 죽이기》 같은 책들을 권했고 읽고 함께 토론했다. 그는 점차 변했다. 인종차별의 잘못을 깨달았고, 지역 KKK의 단장인 아버지에게 흑인인 앤서니를 친구라고 소개했다. 아버지는 악수를 거부했다.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사형수 수감동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드물다.”

앤서니 레이 힌튼은 여전히 자기 앞을 지나가 처형된 54명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 킹사이즈 침대를 샀지만, 30년 동안 그랬듯이 태아처럼 웅크리고 잔다. 정부는 그에게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다.

그는 날마다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영수증을 챙기고, 보안 카메라 앞으로 다닌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 싶으면 몇몇에게 전화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알린다. 밤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잘 자라는 인사를 한다. 날마다 빠짐없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다.

영화뿐 아니라 책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 《그들은 목요일마다 우리를 죽인다》도 좋을 것이다. 미국의 법과 감옥에 드러운 인종과 계급 차별의 길고 추악한 그림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올해 미국에서 아래로부터 분출한 위대한 저항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이다!

〈저스트 머시〉는 각종 온라인TV 채널에서 유료로 볼 수 있다.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사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6월 한 달간 영화를 무료로 공개한 바 있다.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아그니에슈카 슈미트-모제 /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낙태권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폴란드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을 매일 휩쓸고 있다.

사람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10월 22일 내린 혹독한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형아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지어 태아에게 두개골 절반이 없어서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죽게 될 경우에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분노한 시위대는 이것은 끔찍한 고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폴란드에서 2016년에 낙태금지법 개악 시도에 맞서 승리를 거둔 일은 유명하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수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거리에 나섰다.

시위 둘째 날인 10월 23일에는 수도 바르샤바에서 최소 1만 5000명이 행진했고, 포즈난과 브로츠와프에서도 1만 명이 행진했다. 시위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은 최대 3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의사들은 일상적인 산전 진료와 시술을 할 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폴란드의 낙태 금지 법들은 이미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가혹하다.

현재 폴란드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낙태 시술의 대부분이 태아에 기형이 있는 경우다.

2019년 이뤄진 합법적 낙태 시술 1100건 중 1074건이 이런 경우였다. 전체 임신 중절 수술 중 거의 98퍼센트에 이른다.

매년 폴란드 여성 15만~20만 명이 낙태 시술을 받으려 해외로 나가야 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적이고 비싼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낙태권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은 이조차 부족하다고 한다.

‘낙태 금지’ 단체 회원이자 낙태금지법을 강화하라고 떠드는 주요 인물 중 하나인 카야 고데크는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기 바란다고 전부터 말해 왔다.

폴란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일일 확진자·사망자 수가 기록적으로 치솟는 와중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27일 하룻동안 신규 확진자가 1만 6300명이었다.]

정부는 10명 이내로 집회 참가를 제한했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전염병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뛰어넘을 만큼 분노가 크다. 시위 조직자들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엘리트주의적이고 계급 편향적인 서구의 사법적 기준에서 봐도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다.

강경 우익 집권당 법과정의당(PiS)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강경 대응

법과정의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가 헌법재판소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카친스키는 낙태권, 성소수자 권리, 인종차별 등의 쟁점에서 자신이 우익이나 파시스트보다도 더 강경함을 보여 주려 한다.

카친스키는 반동적인 가톨릭교회 상층부의 지지를 계속 다져야 하는 처지기도 하다.

소위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전문가’라는 자들은 진즉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폴란드인 약 80퍼센트가 낙태금지법 개악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법과정의당 투표자 중 58퍼센트도 이번 개악에 반대하고 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꼼수를 부린 것은 정부가 비겁하고 확신이 없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었다.

시위는 분노가 들끓고 강철 같은 결의에 차 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다!” “법과정의당은 꺼져라!” 같은 구호들이 나왔다.

여성들은 분노에 가득 차 아주 먼 거리도 아랑곳 않고 행진했고 헌법재판소 건물, 법과정의당 당사, 카친스키의 집 밖에서 구호를 외쳤다.

23일에 시위대는 도시를 가로질러 총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의 집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택시 운전사들은 시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도로를 봉쇄했고, 구급차 노동자들도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 첫 이틀 동안 바르샤바에서는 시위가 몇 시간이고 계속돼, 각각 새벽 2시와 자정이 돼서야 끝났다.

정부는 겁을 먹었다. 경찰은 [10인 이상 집회 금지라는]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위대를 거리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십 명에게 최루가스를 뿌렸다.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시위는 매일같이 계속되고, 작업장 행동이 필요하다는 호소도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런 주도력이 발휘되고, 거리 시위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이번 판결을 뒤집고 더 나아가 여성의 요구만으로 낙태를 할 권리를 쟁취할 열쇠다. 노동조합들이 이 운동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요즘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연단이나 시위 대열에서 이런 말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것은 전쟁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8호 / 번역 강미령



사진 출처 Pracownicza Demokracja

10월 24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시위. 코로나19에도 1만여 명이 모였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있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

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 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갇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미국 대선

누가 당선되든 변화는 대중 스스로 싸워야

소피 스카이어

사람들은 미국 대선 날 밤 펼쳐질 무시무시한 상황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으며,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겨나기를 하나같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대안은 대중 운동에 있지, 트럼프와 경합하는 조 바이든에, 민주당에, 신자유주의 중도에 있지 않다고 **소피 스카이어**는 주장한다.

무시무시했던 4년이 지나고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피해, 실업지원금이나 식량 배급을 받으려 길게 늘어선 줄, 경찰의 인종차별과 폭력에 맞서 벌어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트럼프의 위기를 낳았다.

트럼프의 재앙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대처로 미국 전역에서 22만여 명이 죽고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불평등이 더한층 심화됐다.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흑인의 코로나바이러스 치사율은 백인의 세 배나 된다.

실업도 치솟고 있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분투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극우와 인종차별주의자들을 계속 고무한다.

트럼프는 파시스트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에게 투표를 앞두고 “물러서서 일단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가 부추긴 파시스트 단체는 ‘프라우드 보이즈’만이 아니다.

최근 TV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큐어년(QAnon) 음모론*에 무언의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음모론은 유대인 혐오자들과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단골 소재다.

2017년에 한 파시스트가 버지니아주(州) 살러츠빌에서 반(反)파시즘 시위 참가자 헤더 헤어를 살해했을 때, 트럼프는 양쪽 시위대 “매우 선량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의 이민자 강제 추방, 강제 수용소, 이민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인종차별적 마녀사냥은 우익에게 힘을 실어줬다.

인권 단체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의 발표에 따르면 아직도 545명의 미등록 이주민 아이들이 강제 수용소에 분리 수용되면서 생이별한 부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패하면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를 거듭 거부해



사진 출처: Donald J. Trump(트럼프)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해도 4년 동안 그가 만든 오물들이 남을 것이다

왔다.

트럼프는 극우 단체들이 미시건주와 버지니아주에서 현직 주지사들을 납치 살해하려 모의한 것을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했다.

트럼프를 “일탈”이나 심지어 미국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에서 펼쳐진 공포 드라마의 최신화일 뿐이다.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는 미국 사회가 처한 심각한 위기의 한 증상이었다.

자본주의가 “자유와 행복 추구”를 가져온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수많은 노동계급·빈민·흑인들에게 언제나 환상이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 새 그 꿈은 점차 악몽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2017년 초 실질임금 평균은 1972년보다도 높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중도의 실패가 낳은 절망과 환멸 속에서, 억만장자 트럼프는 워싱턴의 엘리트들을 뒤흔들 “반(反)기득권”, “아웃사이더” 행세를 할 수 있었다.

우파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민자와 소수자에게 돌리고, 낙태권이나 성소수자 권리 같은 “문화 전쟁” 쟁점으로 계급을 분열시켜 득을 보려 했다.

이는 2016년 대선에서 월가와 대기업의 대변자이자 일등 전쟁광인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한 트럼프에게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또다시 자신들과 같은 속속

의 인물을 트럼프의 대항마로 출마시켰다. 미국 사회주의자이자 연대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지부 공동 창립자인 마이클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포괄적인 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을 둘러싼 대부분의 논의는 ‘문명으로 돌아가자’거나 ‘철든 인간을 백악관에 앉히자’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클린턴에게는 없던 후광이 있는데, 바로 그가 버락 오바마의 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기업·국방부·CIA 등 미국 국가의 심장부에 있는 살인마들을 대변하는 후보다.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염원을 업고 당선한 오바마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학살을, 나라 안에서는 이민자 추방을 계속했다.

10만 달러(약 1억 1300만 원) 이상 기부자들의 기부금 약 2억 달러(약 2250억 원)가 바이든 선거운동본부에 쏟아졌다. 트럼프가 모은 돈의 곱절이다. 부자와 기업들에게서 온 돈이다.

전염병 대유행이 한창임에도, 바이든은 전국민 단일건강보험 정책을 지지하기를 거부하고 민간 의료·제약 기업들에게서 후원금을 챙기고 있다.

바이든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의식해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은 바이든의 트

레이드마크였다. 1994년에 바이든은 ‘폭력범죄 단속 및 법집행법’의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 법으로 경찰 10만 명이 거리에 [추가로] 배치됐고 민영 교도소에 재정이 흘러 들어갔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올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했을 때, 바이든은 사람들의 다리를 쏘도록 경찰들을 훈련시키지자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주들의 정당이지만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다. 그러나 거의 어떤 기대도 품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투표자의 과반(56퍼센트)이 “트럼프가 아니어서” 바이든을 찍는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분출했던 운동들과 노동자 저항이 바이든 지지에 간헐 위험이 상당하다. 예컨대 “일단은 바이든”이라는 슬로건이 SNS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고 지금은 일종의 캠페인이 되고 있다.

마이클 브라운은 노동계급의 반격이 절실한 때에 로스앤젤레스 지역 노동조합들이 민주당 지지 호소에 집중하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로스앤젤레스지역노조연맹은 선거 때마다 노동조합 활동 거의 전부를 제쳐두고 민주당을 위한 가가호호 방문 선거운동과 전화 후원 모금에 몰두합니다.

“그 결과, 협소한 선거 정치 바깥에서 노동운동이 활동할 여력이 남지 않

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헬 드레이퍼는 이렇게 물었다. “1968년 대선, 누가 차악이 될 것인가?”

이는 1964년 대선 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 쓴 말이다. 당시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인종차별주의자 배리 골드워터와 민주당의 린든 존슨이 경합했다.

존 F 케네디의 부통령이었고 케네디 암살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은 흑인 평등권 운동에 대한 조건부 지지 정책도 계승했다.

민주당은 흑인들을 민주당의 투표 부대로 끌어들이면서도 운동의 급진성은 제약하고자 했다.

흑백 분리 지지자였던 골드워터는 흑인 평등권 운동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벌였다.

존슨이 계승한 케네디의 또 다른 정책은 베트남에 군사력을 쏟아붓어 베트남 민족해방투쟁을 짓밟는 것이었다. 몇몇 좌파들과 반전 운동 일각은 골드워터에 맞서 존슨에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존슨은 집권하자마자 베트남에 대부대를 파병했다.

훗날 드레이퍼는 이렇게 물었다. “1964년 대선에 누가 진짜 차악이었나?”

차악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드레이퍼는 이렇게 썼다. “이 고전적 사례의 교훈은 차악이 최악과 같다는

▶ 7면으로 이어짐

용어설명

큐어년(QAnon)

인터넷 게시판 ‘4chan’에서 Q라는 익명의 인물이 펼친 음모론을 지지하는 흐름. 클린턴, 오바마 같은 민주당 권력층이나 영화배우 톰 헉스 같은 유명 인사들이 소아성애와 식인을 일삼는 음모적 집단의 일부이며, 트럼프는 그들에 맞선 구원자라는 황당무계한 내용이다.



사진 출처 Milwaukee Coalition Against Trump

바이든 정도에 만족 말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

▶ 6면에서 이어짐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런 터무니없는 교훈을 얻으려는 게 아니다.”

우익

진정한 교훈은, 기성 체제를 떠받치는 자들에게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힘을 희생시켜서는 우익에 맞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점거하라’ 운동 참가자이자 팻 캐스트 ‘그린 앤 레드’ 출연자 스콧은 2000년대 후반에 겪은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조지 W 부시의 전쟁 물이에 맞서 거대한 운동이 있었는데, 사실

오바마는 그 운동을 흠여 버리고 월가에 팔아 넘겼다.” 좌파와 사회운동이 민주당의 공무니를 쫓자 우익이 힘을 얻었다.

드레이퍼는 이렇게 썼다. “민주당이 노동운동 표를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정치 지형은 점차 우경화해, 린든 존슨 같은 자가 차악으로 보일 지경이 됐다.

“이것이 차악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을 때조차 차악을 지지하면 우파에 맞선 진정한 투쟁의 가능성을 깎아먹는 핵심 이유다.

“선택지가 자본가 정치인들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제한된 선택지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패배가 온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만들어 이 썩어빠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 희망은 민주당 밖에서 투쟁을 건설하는 데에, 썩어빠진 체제를 대변하는 양당 체제와 결별하고 진정한 변화를 위한 투쟁을 건설하는 데에 있다.

마이클 브라운은 이렇게 덧붙였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존재하는 거리의 사회 운동을 심화시키는 구실을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려야 하고, 독립적인 노동계급 정당의 필요성을 포함해 계급 정치를 계속 고취해야 합니다.”

선거 뒤에도 운동과 저항을 계속 건설해야

미국에서는 트럼프 집권 첫날부터 계속 시위가 벌어졌다.

트럼프의 임기는 300~500만 명이 참가한 ‘여성 행진’,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에 맞선 시위·파업과 함께 시작됐다.

그후 몇 년 동안 교사 파업 물결이 몰아쳤다.

2018년에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파업에 참가한 교사는 자신들이 “혁명을 시작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그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오클라호마주 교사들과 뉴저지주의 일부 교사들도 뒤이어 투쟁에 나섰습니다.”

올해에는 파업이 수천 건 벌어지기도 했다. 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안전하지 못한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비공인 파업이었다. 미국 노동자 투쟁을 보도하는 인터넷 언론 〈페이데이 리포트〉에 따르면 비공인 파업이 3월 초부터

약 1100건 벌어졌다.

6월 ‘흑인 목숨을 위한 파업’처럼 노동자 투쟁과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연결하는 노력도 있었다.

손바닥만한 마을에서조차 사람들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고 외치며 행동을 벌였다.

이번 항쟁은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담론을 열어젖힐 것이다.

8월에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유색인 사회주의자들’ 회원인 앨버트 리는 분위기 변화에 관해 이렇게 전했다.

“이전에는 저나 다른 사회주의자들이 경찰 해체나 교도소 폐지에 관해 말하면, 너무 급진적인 생각이라고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바이든과 민주당이 아니라 이런

투쟁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그린 앤 레드’ 출연자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어떻게든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투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그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바이든을 지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투쟁을 계속할 거예요.

“좌파 중에는 바이든에 투표하라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녹색당에 투표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투표를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근본에서 보면 이런 주장들은 선거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8호 / 번역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으로 미국 사회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 슬로건은 빌 클린턴의 [대선 선거 운동] 보좌관 중 한 명이 만들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 슬로건을 앞세워 재선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노믹스”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것이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주로 중국을 겨냥했고 정도는 덜하지만 유럽연합도 겨냥했다. 이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일자리를 중서부 ‘러스트 벨트’ 주(州)들로 되돌리려는(“리쇼어링”) 목적에서 고안됐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두고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퇴행적 케인스주의”의 일종이라고 했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케인스는 국가가 세금을 삭감하고 지출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 트럼프가 실질 법인세를 거의 반토막냈는데도 — 투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기업들은 늘어난 현금을 주로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해 주가를 올렸다. 중국과 벌인 무역 전쟁으로도 적자는 크게 줄지 않았고 “리쇼어링”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2019년 실업률이 1969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고 주식 시장은 급등했다. 트럼프는 여기에 기대 재선하려 했다.

그때 코로나가 닥쳤고, 경기가 거의 100년 만에 최악으로 후퇴했다. 2020년 4월에 실업률은 10퍼센트포인트 치솟았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블로거인 마이클 로버츠는 이렇게 썼다. “트럼프노믹스의 진정한 성격은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이다.” 공화당은 애초에는 경제 붕괴를 막으려고 가구별 지원금 직접 지급을 지지했지만, 그럼에도 2020년을 주름잡는 것은 신자유주의였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과 힘을 합쳐, 연방정부 지출로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반대했다. 그 대신 트럼프는, 대유행 초기에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를 하루빨리 끝내서 경제를 재가동하는 데 기대를 걸었다. 이는 트럼프에 심각한 역풍으로 작용했다.

10월 23일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8만 301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공화당과 영국 보수당의 주장과 달리, 경제활동 유지와 전염병 대유행 대응 사이에 “절충”이란 없다.

경기 수축

정부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 나라는 경기 수축의 폭이 더 적었다. [세계적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2020년 4사분기에 미국 경기가 정체하거나 수축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와 경합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은 코로나19에 진지하게 대응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 역시 정부 지출을 늘릴 것이다.

바이든은 지출 규모가 10년간 약 7조 3000억 달러[한화로 약 8200조 원]에 이를 공약을 내걸고 있다. 바이든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민주당 내 좌파들이 주장하는 ‘그린 뉴딜’은 거부하지만, 기후 변화 대응에 약 2조 달러[한화로 약 2300조 원] 가까이 쓰겠다고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바이든노믹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를 지킬 수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정책들 때문에 바이든이 클린턴·오바마보다 두드러지게 왼쪽에 자리매김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역시 막대한 정부 지출을 약속했던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악을 썼던 것과 달리, 바이든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는 유권자들의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만연한데, 특히 청년층에서 그렇다. 이런 분노는 전면적 체제 변화에 대한 요구로 변질 위험을 여러 차례 보여 왔다.

“바이든노믹스가 시행된다면 기업과 고소득층의 삶은 더 부담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미래에 더 큰 심판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주류 신자유주의 기득권층이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를 보여 주는 흥미로운 서술이다.

이들은 트럼프가 2007~2009년 전 세계적 금융 위기 때문에 자라난 분노에 올라타 집권했음을 깨닫고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약간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부른 정책들로 이 불만을 흡수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것이다.

이는 헛된 희망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마이클 로버츠가 보여 주듯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낮은 이윤 때문에 계속 악전고투하고 있다. 투자가 정체하는 까닭이다. 정부 지출을 늘려도 잘해야 단기적 효과만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 대중이 느끼는 쓰라림은 기득권층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하다. 억눌렸던 그 분노는 트럼프 하에서 분출하기 시작했다. 설령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더라도 그 분출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28호 / 번역 김동욱

권력형 부패 문제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다

김문성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검찰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지난주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이고 법제 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부하가 아니라며 직격탄을 날렸었다.

추미애는 10월 2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나와,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는 라임 사건은 검사 게이트로, 옵티머스는 특수부 검사들끼리 서로 봐준 사건으로 규정했다.

급기야 27일 추미애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시절에 중앙지검 산하 수사팀이 옵티머스 건을 무혐의 처리한 일을 감찰하라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검찰의 목적은 윤석열이 무혐의 처리의 배후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관련 인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박근혜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과 함께 일했던 이규철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둘 다 옵티머스 고문에 이름을 올렸었다. 윤석열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문재인은 이 난타전에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 핵심부와 검찰 간 갈등의 근저에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다.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갈등은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인의 측근인 조국을 처낸 윤석열의 수사, 수사 방향이 문재인 본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이 충돌의 뇌관이 있을 것이다. 울산 건은 각종 인사 개입과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윤석열이 자진 사퇴 의향을 묻는 지난주 국정감사 질문에 인사



그 시절 그들이 좋아했던 검사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과 분열을 불러 온 것은 결국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 문제였다

권자의 뜻이 없으므로 그럴 생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시사적이다. 그날 윤석열은 총선 직후 문재인이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비겁하게 자진 사퇴 압박 가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 보라는 의사 표시인 셈이다. 윤석열은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당시 새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막 지명된) 조국에 대한 수사에 선처를 요구하자, “번민을 했다”고 표현함으로써 배신당한 건 자기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비겁

다른 건 몰라도 딱 한 가지 점에서는 문재인이 윤석열을 제대로 배신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임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

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대로 실천한다면 문재인은 지금 바로 추미애를 해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권력형·특권형 부정이 드러나 장관직을 사퇴한 조국에게 “마음의 빛이 있다”며 애석해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검찰이라는 핵심 국가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전 국민 앞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문재인인의 침묵이 더 길어지기도 어렵

다. 잠재적 폭탄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뿐 아니라 라임과 옵티머스 건으로 연루된 여권 주요 인사들이 더 늘어났다.

옵티머스 건에서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더라도) 차기 대통령 지지도 전체 1, 2위를 다투는 후보가 모두 로비 대상으로 거론됐다(이재명은 의혹, 이낙연은 소액이지만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윤석열을 그대로 두면 권력누수가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을 잘라내 지지층 이반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이미 드러난 의혹들이 많아서 수사를 다 틀어막기도, 의심하는 여론을 잠재우기도 어렵다.

옵티머스 건만 해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진아가 옵티머스의 돈세탁 통로였던 셉틸리언의 최대 주주였고, 옵티머스가 사기로 조정한 자금 중 1300억

원가량이 셉틸리언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기관들의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주요 인사가 브로커 구실을 했을 가능성이나 자금의 흐름에 수사가 집중돼야 하는데도, 그보다 부차적일 수 있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완전한 사기극이다.

게다가 설사 그 프레임으로 보더라도 당시는 검찰과 정권이 밀월 관계에 있을 때라서 그조차 권검 유착 혐의를 떨치지지는 못한다.

결국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추미애가 반(反)윤석열 목적으로 임명했던 서울남부지검장이 추미애를 비난하고 윤석열을 편들며 사표를 냈다.

최근 제주 고유정 사건을 맡아 유명세를 탄 부장검사 한 명은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2016년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에 대한 강제 수사를 주장했던 검사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 정치인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축소된 특수부가 아니라 우대한 형사부 검사이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주 민주당을 탈당한 것도 시사적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경 비판에 나선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률 회계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은 모두 민주당 개혁파에 친화적이었던 인사들이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반이 권력형 부패 의혹을 틀어막으려는 과정에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배경엔 개혁 배신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은 정치적 불안정을 낳을 것이다

본지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듯이,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입지는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물론 정치 위기가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 레임덕이 곧 올지는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동안 문재인은 야당들의 무능과 오판으로 정치 위기가 심화하는 것을 막아왔다.

국민의힘은 중도화 방향으로 회복하는 듯했지만, 그 회복은 멈춰 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은 중도우파 성향과 태극기 우파 성향으로 분열돼 있고, 국민의힘은 그 둘을 통합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당장 정권 교체 대안도 불투명한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문재인과 맞서는 걸 꺼리는 듯하다. 문재인이 비록 줄타기를 하지만,

친기업 노선에 충실한 데다가, 아직까지는 진보·노동계 지도부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대표적 3조직(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지도자들은 문재인과의 포퓰리즘적 제휴에 미련을 가지고 정치적 차별화·단절을 회피하면서 정치 불안정 격화 방지에 일조하고 있다.

물론 진보계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자라나는 것은 정의당 선거에서도 얼핏 드러났다. 당선이 유력해 보이던 배진교 후보(현 의원)가 원외인 김종철 후보에게 패했다. 배 후보는 지난 10년간 김 후보에 견줘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가깝게 지내 왔다.

물론 김종철 신임 대표는 대표 취임 후 노동자 양보론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연대전략을 꺼내들었다. 진보당은

당명을 바꾸고 지도부를 새로 뽑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 노선에 아직 진정한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좌파는 좌파적 개혁주의로 기울거나, 좌파연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추수하거나, 서로 분열해 있어서 주류 개혁주의 전략에 효과적으로 도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원조부패에다 무능한 우파는 내부적으로 분열해 있고, 진보·좌파도 가시적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하면서, 청년들의 점증하는 불만은 주로 무당층으로 표현되고 있다.

경제 위기는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체제의 부조리와 불평등이 더 악화되다는 뜻이고, 각국 정부들이 갈수록 신용을 잃을 것이라는 뜻이다. 청년들이

기성 정치 세력들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과 휘발성은 강화될 것이다. 이미 이를 배경으로 지난해부터 세계적 반란이 시작됐다. 한국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미국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로 반란이 번져왔다.

이런 상황은 자칫 박근혜 퇴진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가까스로 안정시킨 정치 질서가 청년들의 불만 표출로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배계급 속에서 낳는 듯하다. 특히,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든 아직 어딘가로 수렴되지 않는 기층의 불만이 심각해지고 있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①:
브렉시트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됐을까

★ 미·중의 한국전쟁 논란:
한국전쟁은 '자유 수호'도 '반제국주의 해방'도 아닌 제국주의 간 전쟁

★ 국가자본주의의 우선 순위를 보여 주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들과 대중의 공핍

★ 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이 청년들의 환멸을 낳았다

김문성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부패(정경 유착, 뇌물, 블랙리스트 등)로 범국민적 항의를 거세게 일어나 박근혜 정부가 중도 퇴진을 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새 정부에게 부여된 과제는 대중을 달래서 다시 '정치 안정'을 이뤘, 위기를 겪는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부패한 우파 정부들과 차별화를 해야 했다. 그러려면 저항 과정에서 제기된 개혁 염원에 부응하는 정권처럼 보여야 했다.

이런 과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류를 대변하는 정부가 자신의 진정한 기반과 대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말의 성찬이 있었던 것이다. “촛불 혁명(정부)”, “진보정당 민주당”, “적폐 청산”, “공정” 등은 이 정부의 단골 연결 메뉴였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큰 대중 투쟁이었지만, 전혀 혁명적 수준이나 지향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혁명’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촛불 혁명 정부라고 지칭하는 것은 당시 그 운동의 최종 귀결점이 문재인 정부라는, 즉 퇴진 운동으로 얻은 최대치가 문재인 정부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딜 봐서 문재인 정부가 ‘혁명 정부’인가? 빈 수레가 요란했다.

올해 9월 19일 청년의 날 그 짧은 기념 축사에서 문재인은 “공정”이란 단어를 37번 말했다. 지난해 말 조국 사태 이후 배신감 속에서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다수가 비록 총선에서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너무 싫어서 “미워도 다시 한 번만” 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에게 투표를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총선 뒤로도 윤미향과 정의연의 부정 옹호, 부동산 가격 폭등 상황에서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대박 등이 알려지면서 청년들은 더욱 문재인 의 공정에 대한 환멸로 기울고 있다.

10월 초에 <경향신문>이 창간 74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국 사회를 ‘공정하다고 본 응답자가 32퍼센트(매우 공정 4퍼센트, 대체로 공정 27퍼센트)에 불과했다. 반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갑절에 가까운 59퍼센트(별로 공정하지 않다 38퍼센트, 전혀 공정하지 않다 21퍼센트)였다. 가장 불공정한 집단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즉 정치권으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가 남 탓을 해 왔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개혁 약속을 배신했고, 대중의 염원에 부응하는 일에 실패했다.

위선과 사기

첫째, 문재인 정부는 극도로 위선적인 정권이다. 최근 범민주당계 지식인



아바위 문재인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 정책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었다. 믿었던 청년들은 환멸과 절망을 느끼고 있다

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신간 도서를 내고 이렇게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 가장 대표적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선 공약집 맨 앞에 있던 것이다. 그런데 초기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ㄱ’자도 안 꺼냈다. 검찰이 주로 전임 정부와 사법부를 수사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윤석열과 그의 수사팀을 적폐 청산의 영웅이라고 찬양하기 바빴다. 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격려했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정권 핵심 인사들이 비리가 드러나면서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이제 와서는 만약의 근원이 검찰이라고 하고 있다. 검찰의 중립보다는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본질적으로 “검찰 개혁” 소동은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를 캐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에서 터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인 것이다. 이제 이 싸움은 정권의 레임덕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도 위선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미 2월 초에 이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정부는 파약을 못하거나 모르는 체 했다. 그레 놓고는 외곽 조직과 지식인들을 통해 ‘마스크가 더 해롭다’, ‘마스크 필요 없다’ 따위의 말을 퍼뜨리며 정권 책임론을 희석시키려 했다. 방역 완화를 대통령이 두 번이나 나서서 주도해

놓고는 신천지 등 피해 집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검찰·경찰을 총동원해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을 벌였다. 영업과 다중시설을 강제로 통제하면서도 기업들의 밀집 노동은 허용했다. 무료 식사 제공 같은 공공·민간 복지 활동은 중단시켰었다.

둘째는 부인하기 어려운 부패 혐의들과 특권 감싸기 작태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부터 그랬다. 청와대와 내각에는 정부가 표방한 인사 원칙이나 정령 기준을 못 채운 인사가 수두룩하다. 내각 임명을 완료하려고 문재인은 자신이 천명한 인사 기준을 거듭 완화시켰다. 급기야 고위직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해야 할 책임자인 조국 자신의 특권형·권력형 부패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 참사의 진정한 완성이 아닐까? 사람들은 조국(의 부정과 한사코 그것을 부인하는 모습 둘 다)을 보면서 인사 검증이 느슨했던 이유를 알겠다고 생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여러 사모펀드에 정권 실세들이 얽혀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은 대통령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는 정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내려던 행위(조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펀드 부실을 감추려고 정치권-금융감독당국-검찰 등에 로비하기, 투자 과정에서 각종 돈 세탁과 기업 사냥 등 탈법 행위 벌이기 등이 벌어진 수단이었다. 법무부는 바로 이런 부실과 비리의 총체적 현상에서 딱 짚어서 검찰 로비 부분만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부패 감추기에 대국민 사기까지 벌이고 있다.

윤미향과 정의연의 부정도 감췄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의 성폭행·성추행 사건, 성추행 의혹 등에도 당 차원에서 정직하고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보긴 어렵다.

부동산을 때려 잡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청와대 고위 실장들이 두세 집씩 갖고 있었다. 국무총리, 장관들, 여당 대표·최고위원들이 죄다 강남 등에 집(들)을 소유하고는 부동산으로 수십억 원씩 벌었다.

개혁 약속 배신

셋째는 약속 위반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중의 염원을 배신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내세웠던 구호 중 하나가 노동 존중이다. 그런데 노동 존중 공약의 알맹이들은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

공공부문 정규직 양질 일자리 81만 개 일자리 창출? 안 지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안 지켰다. 최저임금 1만 원? 안 지켰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안 지켰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3년 동안 10만 개 만들었다. 박근혜도 8만 개는 만들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는 공공의료 일자리 늘리기도 포함돼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에 의료진을 ‘갈아 넣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자리 대규모 창출이 사회 전체에 이로웠을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안 갔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에서 불만이 나왔던 것이다.

문재인 공약을 믿고 공무원(또는 대기업·공공기관) 시험을 준비 청년들은 정규직 신규 채용이 늘지 않으면서 당황하게 됐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정규직 전체 TO가 줄어서 지금보다도 더 적게 뽑지 않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청년들 또는 세대 간 갈등이 되고 만다. 적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과 분열을 시키는 것이다.

사실 공공부문 일자리 대거 창출 같은 일을 하려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 충돌을 해야 한다.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걷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을 위해 돈을 쓰는 정부이지 노동자·서민층을 위해서 돈을 쓰는 정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 실업자 반발을 핑계 대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공개 경쟁 채용을 강요해 일부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사이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청년층에서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2017년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일자리 관련 국민 여론 조사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과반이 찬성 의견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가장 많은 찬성을 한 세대가 20대였다. 전체 찬성률이 56퍼센트인데, 20대 청년들의 평균은 61퍼센트였다. 일자리 갈등에서 핵심은 문재인 의 약속 불이행이다.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한편, 세월호나 위안부 문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 위안부 할머니들 청와대 불려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좋은 이미지만 기억에 남기고 모조리 다 약속을 어겼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만 했지, 2015년 합의 파기도 안 했다.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윤미향을 비례위성정당에서 공천해 의원으로 만들어 줬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세월호 참사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 요구는 박근혜 정부에게 특조위 수사권을 요구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월호 문제에서 정권이 성의를 보여 이룬 것이 없다.

문재인은 올해 1월 7일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외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뒤에는 더 강경하게 말했다.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집값이 원상 복귀돼야 한다.”

그러나 올 여름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중위 값만 52퍼센트, 전국은 62.8퍼센트가 올랐다. 문재인 취임 후 지난해까지 상위 1퍼센트가 부동산으로 49억 원을 이득봤다는 발표도 있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중장년·노년 서민층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청년들 일부는 빚내서 주식 투자(“빚투”) 같은 것에 매달리기도 한다.

이미 실패했고, 지향하는 바도 실제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다른 문재인 의 위선적인 개혁에 기대를 거는 것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 10면으로 이어짐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이다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하라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 70퍼센트 이상을 담당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채워 온 것은, 82퍼센트에 이르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와 교사들의 공짜 노동이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 돌봄 이용 가능 인원을 10만 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소관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값싸게 운영하려고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철승·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은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초등 돌봄교실의 현실을 더 악화시킬 공간이 크다. 이 두 법안은 돌봄 시설과 인력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겨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돌봄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공유 시설을 민간에 대부해 수익 창출을 허용하는 등 민간 위탁의 길을 더 주고 있다.

이에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권철승·강민정 법안 폐기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6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돌봄전담사들의 이번 파업은 매우 정당하다. 이 파업은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또한 방과 후 아동돌봄의 질과 관련된 만큼 노동계급 전체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전교조 지도부를 포함한 교원단체들은 교사가 돌봄교실 업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잖은 교사들이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는 돌봄교실 업무와 책임이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부당한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이관은 그런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더라도 “기존 계획된 예산을 추가 확



민간위탁에 길 터 주는 지자체 이관은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키고, 교사들의 업무 가중 문제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10월 27일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전담사 파업 선포 식발식(왼쪽), 10월 22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돌봄전담사 파업 결의 기자회견(오른쪽)

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사의 돌봄 업무 이관을 위한 인력 확보나 겸용교실 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입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대로라면, 돌봄교실의 관리·운영 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되더라도 실제 시설은 학교를 이용할 공간이 크다. 그러면 교사의 돌봄 업무와 책임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소관이 다른 돌봄교실을 관리하게 돼 더 과중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는 돌봄 공급을 조금 늘리면서도, 이에 필요한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그 공백을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즉,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계획은 공적 돌봄에 대한 정부 책임을 털고,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저렴한 노동으로 때우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조 501억 원이나 감액했고,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예산도 400억 원 넘게 줄였다. 이런 정부와 여당이 돌봄교실 관리 책임을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해서 재정을 더 지원할 리 만무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 줬다. 복지책임을 것처럼 하더니 재정 지원은 하지 않고 복지 사업들을 지자체에 떠넘겼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 세워진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서비스들은 대부

분 민간업자에게 내맡겨졌다. 직영이라 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노동자로 채워졌다.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화하려고 한다.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돌봄전담사 등)의 이해관계는 다르지 않다.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업무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이런 갈등은 정부가 돌봄교실에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돌봄노동자와 교사 모두에 이롭다

교사들이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려면 안정적인 전일제 돌봄전담 인력이 대폭 늘어야 한다. 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져야 하며, 돌봄 전용교실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투쟁에 나선 돌봄전담사들은 시간제 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인력 확충을 통해 돌봄 업무에 대한 교사 책임을 없애고,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우는 돌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 연대하는 것은 교사들과 노동계급 전체에 이롭다.

일부 전교조 좌파 활동가들은 ‘지자체 이관 반대’를 파업 요구로 걸지 말고, 교

사와 돌봄전담사 공통의 요구가 될 수 있는 시간제 전일제화 같은 요구를 걸자고 주장한다. 아마도 전교조 안에서 지자체 이관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다고 보고 절충하는 듯하다.

그러나 민간위탁 방식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분명한 만큼,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명확히 반대하며 파업을 지지해야 한다.

현재 전교조 조합원 다수의 정서를 그저 추수하는 게 아니라, 비록 소수에서 출발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년 전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이나 학교 비정규직 투쟁 등에서 전교조 좌파 지도부가 원칙 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해 결국 전교조의 결속력과 투쟁력도 약화시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그 원칙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돌봄전담사의 노동조건과 교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돌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자!

이 글은 10월 28일 발표된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서이다.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는 교사들의 활동, 이렇게 함께해요!

첫째,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의 돌봄전담사 파업 지지 성명, 카드뉴스 등 관련 글 등을 학교 내 메신저나 문자 등으로 널리 알려 주세요. 돌봄전담사들이 큰 힘을 얻을 겁니다. (노동자연대교사모임 블로그 edu.workerssolidarity.org/)

둘째, 같은 학교의 돌봄전담사들과 전교조 조합원들의 간담회를 열고 파업에 연대해 주세요. 알림장이나 안내장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이번 파업의 의의를 알리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중등 교사들도 파업에 나서는 지역 돌봄전담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주세요.

넷째, 해시태그 (#돌봄파업_지지 #아이들을_위한_돌봄파업)를 달아서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게시해 주세요.

다섯째,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 쓰기와 인증샷 찍기에 함께해 주세요. 파업에 나서는 돌봄전담사들에게 메시지와 인증샷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하는 인증샷도 환영입니다!

※이메일 irang29@hanmail.net 또는 010-4602-9817로 인증샷과 지지 메시지를 보내 주세요.

▶ 9면에서 이어짐

개혁 배신과 공정에 대한 갈구

문재인이 청년들에게 한 공정 약속도 실패했다. 그 목적이 노동 존중이나 청년들을 위한 기회 확대 같은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초점은 경제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중요한 기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경쟁 신화와 같다. 기술 경쟁이 치열한 세계경제 상황에서 한국 자본주의가 기술 혁신 등을 빨리 하려면 경쟁을 고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편에서의 경쟁은 한편에서의 정부 투자 몰아주기로 뒷받침된다. 이런 것이 문재인이 외친 ‘기회가 평등

하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의 실체다.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은 공정 경쟁을 약속할 테니 결과에 승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쟁은 계급 간에 공정하게 전개될 수 없다. 누구는 일 자리에 구애받지 않거나 안정적 소득과 사회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전문직 일자리를 세습에 가까운 방법으로 물려받는 반면, 누구는 줄어든 일자리를 놓고 비슷한 포래들 또는 성인들과 극심한 경쟁과 박멸을 벌여야 한다.

결국 청년들이 공정을 중시하고 공정한 경쟁에 대한 갈구를 보이는 것에 경제 위기 고통이 계급 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도 있는 것이다. 계급 불평등에 대한 항의와 분노가 공정한 시장 경쟁에 대한 갈구로 표현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체제가 약속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회라도 공정하게 달라고, 노력이라도 해서 도전할 기회라도 달라고 하는 듯하다.

지금 노동자 투쟁이 희망과 돌파구

를 주기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좌파의 담론이 별로 강하지 않다. 이것이 체제 불평등에 대한 분노·절망·반감 같은 것들이 오히려 주류적 상식에 해당하는 공정 경쟁에 의존하는 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가 모든 세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대중은 기성 체제의 신용도가 파탄 나는 현실을 살고 있고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우에 대한 개인들의 불만·분

노는 체제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항의와 연결될 수 있다. 많은 개인들이 체제를 의심하고 분노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자들은 공정 담론의 약점만 보지 말고 개입해서 이런 불신과 분노를 집단적 투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노련하고 체계화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 글은 10월 26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문재인 정부와 공정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택배사는 부실 대책, 정부는 수수방관

끊이지 않는 과로사에 택배 노동자 불만 폭증

신정환

“두 달만에 몸무게가 24킬로그램 빠졌습니다. 먹지 못 하고 자지 못 하고 힘들게 일하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과연 롯데택배에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나 있을까요?”(민종기 택배연대노조 서울지부 강동롯데지회장)

10월 28일 롯데택배 파업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 장시간 노동, 임금(수수료) 삭감, 택배사의 ‘갑질’에 울분을 터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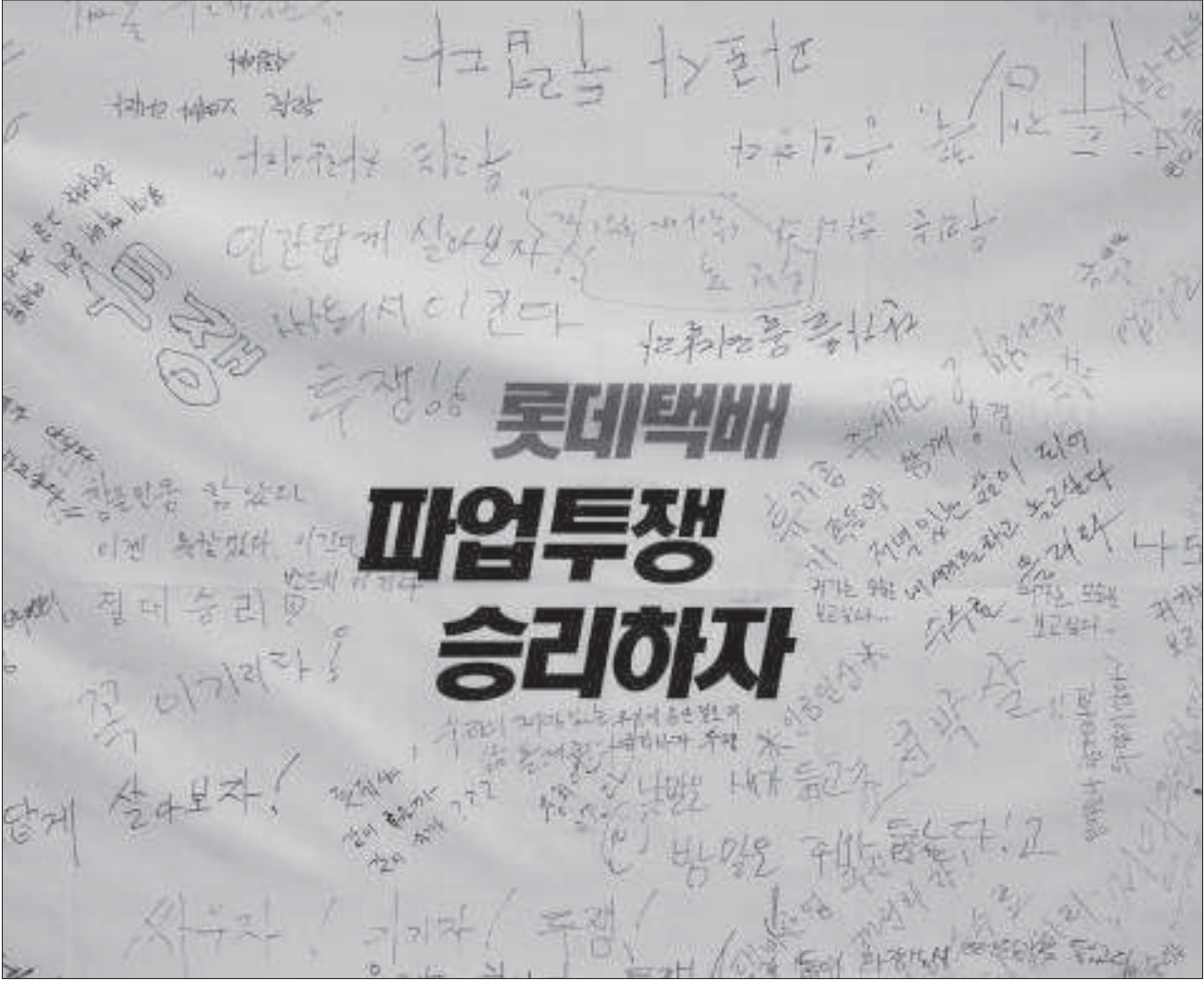
택배사들과 정부가 부실 대책, 책임 회피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방치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비극적 죽음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달(10월)에만 6명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올해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들은 현재까지 14명(택배 기사 9명, 택배 포장·운반 종사자 5명)이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위원회’).

주요 택배사들이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내용도 미흡하고 이행 시점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택배사들이 여론의 비난만 일단 피해 가려고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택배업계 점유율 약 75퍼센트를 차지하는 ‘빅3’인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사측(이하 빅3)은 최근 분류인력의 단계적 투입, 산재보험 가입 권고, 노동자 건강검진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빅3는 분류 인력 5000명(CJ대한통운 기존 1000명 제외) 투입을 제시했지만 이는 최소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이조차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얼마의 인력이 언제 투입될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인력 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벌써 CJ대한통운은 대리점주들을 불러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면 대리점주들은 택배 기사들에게 비용



“저녁 있는 삶을 달라” 10월 27일 롯데택배 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적은 글귀

을 분담하자고 하거나 [택배 기사들에게 물리는] 수수료를 더 올릴 것이 뻔하다.”(남희정 택배연대노조 서울지부장)

꼼수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전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보험료 전액을 사용자가 내는 것과는 달리 택배 노동자들은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했다. 택배사들은 이번 대책에서 대리점과 계약할 때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권고라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보험료 지원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

이번 대책엔 임금(수수료) 인상과 고용 안정 대책도 빠져 있다.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 원인에는 손 대지 않은 셈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배달하는 물건 당 수수료가 수입의 전부다. 그런데 택배사들은 계속해서 저단가 정책을 시행해 왔다. 노동자들의 수수료(임금)는 십수 년간 동결됐다. 심지어 롯데택배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했다. 노동자들이 과로를 감수하면서도 심야 배달을 멈출 수 없는 까닭이다.

일각에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개선하려면 배달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짐을 나눠

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겨레>는 10월 25일자 사설에서 “소비자가 편의의 일부를 내려놓고 짐을 나눠 지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불리한 산재보험료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도 더 커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측과 정부의 책임을 흐린다. 저단가 경쟁의 책임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시장이 더욱 커졌다)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과로사로 내몬 택배사들에 있다. 빅3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1420억 원, 527억 원, 1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30퍼센트 급증했다. 택배사들은 주요 고객인 상품회사들에게 일명 ‘백마진’(상품 단가 가운데 일부를 깎아 주는 것)을 제

공하며 치열한 유치 경쟁도 펼쳤다.

한편,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 탓에 노동자들은 언제 계약 해지를 당할지 몰라 불안해 하며 택배사와 대리점주들의 횡포에 시달려 왔다. 그 속에서 로젠택배 기사는 10월 20일 “억울합니다” 하고 적힌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정부의 책임 회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속출하는데도 문제인 정부는 형식적인 근로감독만을 하며 수수방관해 왔다. 정부는 11월 중이나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그조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지 미지수이다. 민간 사업자들을 어찌 할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노동시간 규제 적용과 노동자성 인정,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과 보험료의 사업주 전액 부담 등의 대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를 보더라도,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며 사기를 쳐 왔다. 우정본부는 추석 성수기에 분류 인력 3000명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으며 현장에선 전혀 변화를 느끼지 못 하고 있다”(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 박대희 서울본부장).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10월 26일 동서울우편집중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열악한 근무조건이 널리 알려지며 택배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요구에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저항도 벌어지고 있다. 택배연대노조 소속 롯데택배 노동자들은 수수료 원상 회복과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10월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러한 행동들이 더 확산된다면 택배사와 정부의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책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흑자에도 노동자 ‘구조조정’ 하는 SK브로드밴드

장한빛

SK브로드밴드는 코로나19 특수와 티브로드 합병의 효과로 올해 큰 수익을 올렸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3퍼센트 증가한 1조 7420억 원, 영업이익은 59.4퍼센트 급증한 982억 원이다. 합병 덕분에 6월 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1월에 비해 무려 90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호황에도 인터넷·케이블 수리설치 노동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한 채 일을 해야 했고, 인원 감축과 높아진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강제 전보

올해 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조건으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허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2~3년 동안 하청업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 기간을 틈타 하청업체에 내려 보내는 수수료를 삭감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있다. 하청업체도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혈안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중부케이بل이다. 전주기술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중부케이블은 현장 노동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8명을 왕복 5시간 거리인 천안·아산·세종으로 강제 전보했다. 전보된 노동자들은 교통비로만 매달 50~100만 원을 쓰고 있다!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이다. 황당하게도, 정작 전주기술센터는

인력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다. 주말 동안 천안·아산지역의 비조합원 노동자를 전주기술센터로 불러 밀린 일을 처리하기도 했다. 부당한 전보를 철회하면 될 일인데 말이다.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하고 있다. 10월 28일에는 단식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인수합병 속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건 SK브로드밴드만이 아니다.

동종 업종인 LG유플러스도 비슷하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인수

추진 과정에서 CJ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인력의 40퍼센트가 감축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강도와 실적 압박이 강화돼 수리설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터넷·통신 케이블 업체는 모두 코로나19와 인수합병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으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 노동강도 강화, 고용 불안을 강요하고 있다.

원청인 SK브로드밴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

문재인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정진희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문재인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11월 16일 이후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언론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수정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입법 예고 직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중도진보계 언론은 낙태죄 폐지 입장을 밝힌 권인숙·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에 주목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10월 12일, 낙태죄 전면 폐지와 제한 없는 낙태 허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의원 법안의 초안은 10월 27일 언론에 보도됐다. 박주민 의원안은 11월 첫 주에 발의될 예정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전부 삭제하고, 임신 24주 이내 임신부의 의사에 따른 임신 중단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임신 지속이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수 제한 없이 임신 중단을 허용한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안보다는 상당히 나은 법안이다.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에만 사유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유전적 질환, 성별



2018년 7월 낙태죄 폐지 집회에 참가한 여성들

죄,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낙태가 허용된다. 박주민 안에는 정부안에 담긴 상담의무화 조항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낙태를 억제하고자 넣은 의사의 낙태 거부권 조항을 수용했고, 24주 이후 낙태한 경우에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문제다. 비록 여성은 처벌에서 제외되지만,

의사를 처벌한다면 후기 낙태는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일관되게 지키지 않고 타협을 한 것이다.

후기 낙태는 매우 드물지만, 이 역시 금지해서는 안 된다. 조기에 낙태할 기회를 놓친 여성이 불가피하게 후기 낙태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금지하면 여성

이 자가 낙태나 다른 위험한 방식의 낙태를 시도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모든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법적 제약은 모두 없어져야 하고, 재정 지원 등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권인숙 의원의 법안은 낙태죄 폐지에서는 박주민 법안과 차이가 없지만,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낙태가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박주민 안보다 낫다. 하지만 이 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중 극소수(권인숙을 포함해 총 6명)만이 참가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박주민 의원은 당권주자였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라 권인숙 안보다는 더 지지를 모을 수도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는 이미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입법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안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한국천주교회 등 낙태 반대론자들도 박주민 안의 골자가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정안의 골자를 이미 8월에 마련해 놓고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10월에서야 입법 예

고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부안과 박주민 안의 절충안을 마련한다 해도 정부안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9월 23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5개 부처 장관 회의에서 여가부를 제외하고 모두 낙태죄 유지 입장을 취했다. 출산을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한다. 출산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실제로는 '저출산'을 이유로 낙태죄를 유지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속내인 것이다.

'저출산'으로 노동력인구와 징병 대상자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단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보수 정치인들과 지배계급 거의 전체가 공유한다. 따라서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으려면 앞으로 만만찮은 투쟁이 필요하다.

낙태권 운동이 성장하려면, 말로만 성평등을 말하다 뒤통수치는 일을 반복해 온 문재인 정부와 맞설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정부의 낙태 제한 조치와 보수파들의 공격 모두에 맞서 여성의 낙태권을 일관되게 옹호해야 한다. 보수적 반격에 맞서며 실질적 개혁을 성취하려면, 낙태권 운동이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대거 동참하는 대중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낙태가 여성 건강에 해롭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정부안이 낙태 전면 합법화 방안이라고 터무니없이 과장하면서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가 산모와 별개 생명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 그러나 생존을 모체에 의존하는 태아를 두고 '권리'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세한 반박은 본지 231호 기사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참고하시오.)

또, 그들은 낙태가 여성의 건강을 해친다며 낙태 금지를 요구한다. 임신중절 수술의 위험성, 약물의 부작용, 정신건강 문제 등을 지적한다.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을 낙태 전면 금지론자들만이 펴는 것은 아니다. 정부안도 낙태의 위험성을 내세우며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제한한다. 국가 지정기관에서 낙태하려는 사유를 심사받아야 하고, 이를 벗어난 낙태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낙태가 여성에게 위험하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훈련받은 의료인이 정확한 방법으로 시술한다면 낙태는 안전하다. 이렇게 낙태할 경우 합병증을 앓는 여성은 매우 드물다. 오히려 낙태 불법화로 낙태가 음성화되면 안전하지 못한 방식의 낙태가 성행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기 쉽다.

정부안에서 초기 낙태에 처음으로 허용된 낙태약 미프진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와 많은 국가들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를 인정받았고, 2005년에는 WHO의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토록 안전하고 간편한 낙태 방법이 낙태 금지론자들의 방해로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못했던 것이다.

낙태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들은 임신에도 신체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무시한다. 하지만 만기까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합병증을 낳을 수 있고 건강 문제들과 심지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건강 상태

가 좋은 여성일지라도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낙태보다 더 위험하다. 출산이나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세계에서 많은 여성들이 사망하지만 이를 이유로 출산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법적 제한이 있어도 자신이나 가족의 삶을 지키려고 낙태를 하기 위해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벌과 규제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뿐이다. 낙태한 여성들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우울증을 크게 증가시킨다. 처벌이나 낙태 제한 조처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이유다.

여성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낙태를 결심한 여성이 되도록 일찍 낙태할 수 있게 의료적·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필요하다면 늦게라도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도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보수적인 산부인과 의사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은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정부안보다 4주 더 축소해 임신 10주 미만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신 10주 이후 낙태가 여성에게 위험하고, 임신 10주부터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무분별한 낙태'의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낙태죄와 낙태 제한 조치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낙태 제한을 지지하는 의사들의 주장에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자신들의 보수적 관념에 따른 것이다. 이는 모든 의사들의 통일된 견해도 아니다. 진보적 의사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정부 개정안이 "여성의 건강권과 삶을 심각하게 해치는" 안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냈다.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에 반대했고, 상담·24시간 숙려기간과 사유에 따른 제한과 입증 책임도 "여성의 건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요구 절차"라며 반

대했다.

세계적으로도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의사들은 많다. 낙태권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난 아일랜드에서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의사 단체 '닥터스 포 초이스' 공동설립자 패이더 오그레디는 낙태를 제한하는 의학적 기준은 없다고 지적한다.

여성이 무분별하게 낙태를 한다는 주장은 보수적 성 관념과 여성차별적 편견의 발로일 뿐이다. 그러나 성관계의 목적이 꼭 출산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또, 피임에 실패하거나 예기치 않은 성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조건과 미래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를 낳고 말고는 전적으로 임신한 여성 자신이 판단할 문제이지 제3자인 의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의사는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조언을 해야지, 전문가의 권위를 내세워 국가에 여성의 삶을 통제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